

“첫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맡아야”

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협상 앞두고 신경전 원내대표 임기 놓고도 입장차 ... 오늘 협상 시작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공식 협상 개시를 하루 앞둔 19일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이 구체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살바싸움’을 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첫 원내대표를 어느 정당에서 가져갈지, 임기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이다. 평화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자세한 것은 정의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원내대표를 어디서 맡을지는 의원 수가 기준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평화당이 첫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평화당 내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석수가 많은 평화당의 의견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큰 만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 임기를 두고도 양당의 의견이 엇갈린다. 정의당 내에서는 ‘2개월씩 번갈아 맡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평화당 원내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두 당이 번갈아서 할 수 있겠지만, 원내대표 임기 자체를 2개월로 하는 것은 너무 짧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평화당의 다른 관계자도 “과거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에도 1년씩 번갈아 임기를 맡았던 것으로 한다”며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 일각에서는 한쪽이 원내대표를 맡으면 다른 한쪽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공동교섭단체 몫으로 어떤 상임위원장 자리가 배정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이

를 원내대표직과 연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평화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호할 것”이라며 “어떤 상임위원장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협상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할지도 쟁점이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주요한 현안인 남북대화나 선거제 개혁 등에서는 두 당의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동교섭단체가 가능했지만, 노동문제나 경제정책 문제 등에서 정책성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커서 오랫동안 공동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벌써 정의당 일각에서는 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평화당과 정의당은 20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 등이 참여한 ‘3+3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화당 ‘호남 민심챙기기’ 전남서 최고위원회의·상인간담회

23일 광주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민주평화당은 19일 전남도를 찾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와 상인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광주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가진 뒤 ‘지방선거 필수결의대회’도 연다. 이는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평화당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수를 찾은 조배숙 당 대표는 “제2의 IMF사태에 처한 호남경제를 살려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추경은 ‘호남일자리 추경’, ‘호남 경제 살리기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GM군산공장이 문 닫을 위기에 처했고, 해외 매각을 추진중인 금호타이어 고공도 불안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호남발 고공소크로 지역 경제는 제2의 IMF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 일자리를 지키는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호남이 낳은 자식 같은 정당이고, 호남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평화당이 호남의 이익을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장병만 원내대표는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대해 “과거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목소리를 내겠다”며 “제4교섭단체로서 촛불혁명의 완수와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민이 맡겨준 역할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이어 광양 대화축제 현장 방문, 시장 상인 간담회, 광양

만권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역 민심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다. 서울은 정호준 시장 위원장, 광주는 최경환 시장위원장, 경기는 부좌현 시장위원장, 전남은 이용주 시장위원장, 전북은 김종희 시장위원장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주 의결에 따라서 후보자자격 심사위원회와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위원회로 통합 운영된다. 평화당 광주시당도 상무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체제에 들어갔다. 광주시당은 이날 중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들어가 자격심사와 공천관리를 거쳐 4월 중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 최현민기자 cki@kwangju.co.kr /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광주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 의결

2인 선거구 축소 3~4명 선거구 확대

그동안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19일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가 축소되고, 3~4명을 뽑는 선거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점주의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소수 정당과

사회적 약자, 여성 등의 정치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시 선거구 획정위가 제출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는 인구와 동수 비율 5 대 5를 기초로 자치구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의원 2명

을 선출하는 2인 선거구를 종전 16개에서 3개로 줄였다. 대신 3인 선거구는 9개에서 16개로 늘리고, 4인 선거구 2개를 신설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동구의원 정수는 획정위안대로 6명을 유지하고 북구도 모든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확정했다. 다만, 광산구 다선거구와 마천선거구의 경우 획정위안은 각각 3인·3인이었지만, 시의회가 수정의견을 제출해 각각 4인·2인 선거구로 바꿨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이용섭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이용섭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처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의 비서가 문자발송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면서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돼 정치자금법 제 45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호 “광주역 부지에 경양호 조성”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역 부지에 경양호(경양방죽)·태봉산 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녹색수도 광주’ 공약 관련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훼손된 도시의 생태 네트워크를 복원하여 ‘공원속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태봉산·경양호 공원’과 ‘제2의 푸른길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또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연결하는 14km의 구간을 ‘제2 푸른길 공원’으로 조성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도심 속 생태네트워크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향자, 5·18 타워 건립 등 공약 발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광주센트럴파크와 5·18 타워 건립 계획 등 공약의 새로운 미래를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화 수도 광주에 걸맞은 도심공원과 랜드마크 조성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50년이 되어가는 현 기아자동차 공장을 더 쾌적한 부지로 옮기고 그 빈자리에 친환경적인 센트럴파크와 랜드마크를 조성하자”며 “518m 높이의 5·18타워를 함께 세워 세계적인 명소가 만들고 문화콘텐츠를 아우르게 해 연간 수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명소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병훈, 9개 실천전략 등 핵심 공약 제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9일 “‘굿모닝 광주’를 슬로건으로, ‘9 to 5’로 이름짓는 9개의 실천전략과 5대 전략거점 조성 계획을 핵심 공약삼아 ‘경제+문화+생태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9개 실천전략은 일자리 창출과 인구문제 등 광주가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를 실천전략으로 설정한 것이다. 5대 전략거점은 4차산업혁명 스마트시티(서구·광산구/공항이전부지), 문화콘텐츠밸리(동구/아시아문화전당), 경제문화복합타운(북구/광주역), 친환경자동차밸리(광산구/빛그린·진곡산단·첨단지구), 에너지밸리(남구, 혁신도시/에너지밸리단지) 등 지역별 성장 거점을 정해 도시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송갑석,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공작 규명 촉구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9일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벌인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는 오로지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는 치졸한 선거공작이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송 예비후보는 이날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추적을,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사행성 도박인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명진 “집권 여당 전략적 견제 세력 필요”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19일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일자리정책, 청년실업, 최저임금 후속 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목적을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견제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구청장 후보

임택, 의원직 사퇴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임택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임 예비후보는 청년과 어르신이 더불어 일하는 ▲‘마을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정책’, 자영업,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부활을 위한 ▲‘공존공생의 상생경제 정책’, 어르신, 아동, 여성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 복지안전망 정책’, 문화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통한 ▲‘동구 문화브랜드 창조사업’ 등 동구 발전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문상필, 예비후보 등록 본격 선거 운동 돌입



문상필 광주시의원이 1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문 후보는 이날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두암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을 비롯한 북구주민들, 장애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의 공직자들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면서 “활력 넘치는 광주공동체를 의정 활동 목표로 삼고 소신 있는 정치, 공부하는 정치, 비전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시간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감을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K, NH손해보험